

2013  
5



## C O N T E N T S

### ◆ (도시이야기)

- 우리나라 도시설계분야의 연구동향

### ◆ (기획연재)

- 인천의 지명 유래(중구Ⅲ)

### ◆ 도시계획 포커스

- 법률 개정사항
- 새로운 정책

### ◆ 인천시 도시정책 동향

- 조례·규칙 개정사항
- 주요정책



도 시 계 획 과





## 1. 서론

### 1) 배경 및 목적

도시설계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영국의 뉴타운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설계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틀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국가 격변기인 1970년대 경제성장 이후 당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이후 1980년 1월에 제정된 건축법 제8조의2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과 1983년에 제정된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해 도시설계는 제도의 틀 속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도시설계가 우리나라에 제도화된 지 30년이 지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도시설계 연구의 활동의 장(場)이 되어 온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설립된 지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도시설계가 도시발전에 있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해왔으며 그 걸어온 길과 발자취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봄과 동시에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그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를 대표하는 학술지인 한국도시설계학회<sup>1)</sup>의 「도시설계」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연구자수, 연구자소속,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실태를 시계열적 차원에서 서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향후 도시설계 분야가 좀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기초가 될 것이다.

### 2) 분석범위 및 방법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발행하는 문헌으로는 크게 「도시설계」와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뉴스레터(Urban Review)」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그 동안의 도시설계분야의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를 대표하는 학술지이며, 학회가 창립된 2000년부터 다양한 논문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게재해온 「도시설계」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존의 도시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

구 자료와 다른 학문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동향에 대한 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한국도시설계학회의 「도시설계」에 게재된 논문을 전수조사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활용해 빈도 및 교차분석(Crosstabulation) 등의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3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연구영역에 대한 추이분석으로 크게 이론 및 응용(설계)연구와 공간적 영역, 학문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 및 연구영역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수집방법과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관점인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공동연구의 변화와 도시설계분야 구성원의 확산 및 발전 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연구자수와 연구자의 소속, 연구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았다.

## 2. 분석의 틀

도시설계분야와 연관성이 많은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분야와 기타 다른 학문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도시설계의 계획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영역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이론 및 응용(설계)연구'와 '공간적 영역', '학문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 및 연구영역별 비중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중 '공간적 영역'은 도시설계의 목적<sup>2)</sup>과 일반적인 도시설계 제어요소 등을 고려하여 '도시단위', '지구/마을단위' 그리고 선·점적 공간인 '가로 및 건축물'로 세분화하였으며, '학문적 영역'은 한국도시설계학회 논문투고/심사규정의 학술연구논문 구성(제4조)과 11개의 심사분과를 재분류하여 총 7개 항목(도시계획 일반, 도시설계/조경설계, 도시개발/단지계획, 경관계획, 도시역사, 정책제도, 환경/생태)으로 학문적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1) 한국도시설계학회는 국가적 격변기인 1970년대 말에 태동하여 1984년 전문가 모임인 도시설계연구회를 모태로 출발하였으며, 1999년 학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3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되었음.

2) 도시설계의 목적은 기술과 시각적 측면에서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 개선 즉, 도시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두 번째는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수집방법과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관점인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야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연구와 「도시설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와 '2차(집계) 자료', '면접 및 사례조사', '설계 및 시뮬레이션'으로 분류하여 자료수집방법의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접근 방법은 문헌분석과 법·제도적 분석 등의 '서술적 연구'와 통계적·수학적 분석방법인 '계량적 연구', 사례 또는 내용의 고찰 및 분석 등의 '질적 연구'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 분석의 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연구영역	이론 및 응용	이론연구
		응용(설계)연구
	공간적 영역	도시
		지구/마을단위
		가로 및 건축물
	학문적 영역	도시계획 일반
		도시설계/조경설계
		도시개발/단지계획
		경관계획
		도시역사
정책제도		
도시환경/생태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2차(집계)자료
		면접/사례조사
		설계/시뮬레이션
	연구접근방법	서술적 연구
		계량적 연구
		질적 연구
	계량분석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통계분석모형		
일반모형 및 계량분석기법		
연구자 특성	연구자수	단독
		2인
		3인 이상
	연구자 소속	교수(전임강사 이상)
		연구기관
		관련 기업체
		대학(원)생 및 공무원
	연구자 (제1저자) 지역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비 지원	연구비지원 여부
3인이상		
연구비 지원 기관		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중앙정부(국토해양부 등)
	기타	

세 번째는 공동연구와 학제간 연구의 변화 즉, 도시설계분야가 어느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확산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수(단독, 2인, 3인 이상)'와 논문 발표 당시 '연구자의 소속(전임강사 이상 교수,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원)생 및 공무원)', 그리고 '제1저자의 지역(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는 도시설계분야 구성원의 확산 및 발전 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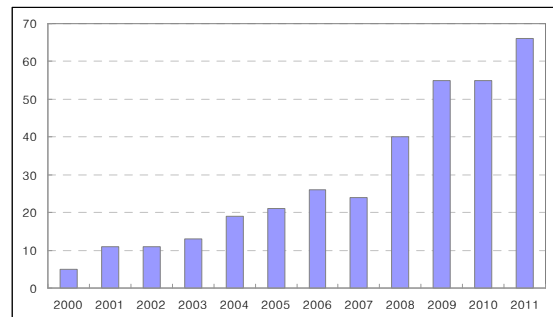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도시설계분야 연구의 연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중앙정부 등)'을 조사하였다.

### 3. 연구영역 및 연구방법 등의 추세변화

#### 1) 연구영역별 추세변화

##### □ 게재논문의 변화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창립된 2000년 12월 「도시설계」 창간호에 게재된 5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48편이 발간되었으며, 총 34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림 1> 연도별 게재 논문수

게재 논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한해 평균 22~23편 정도이었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도시설계 관련 전공자들이 본격적인 연구자로서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2008년에 학회지가 등재지로 선정되면서 게재논문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이론 및 응용(설계)연구 비중의 변화

순수 이론연구의 경우 2005년까지 매년 1~2편정도가 발표되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는 반면 '응용(설계)연구'는 96.8%인 271편으로 3.2%(9편)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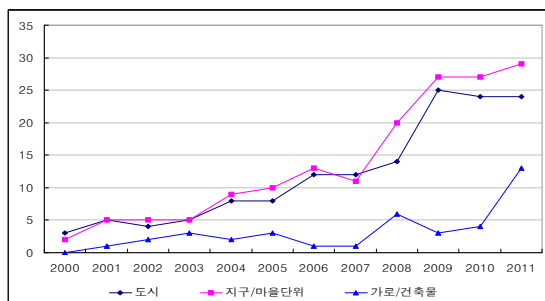
론연구'보다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개발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개별건축 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시설계의 목적에 따라 '이론연구'보다는 '응용(설계)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 공간적 영역

도시설계의 목적과 일반적인 도시설계 제어요소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영역을 크게 '도시단위'와 그 하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면적인 '지구/마을단위' 그리고 선·점적 공간인 '가로 및 건축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와 '지구/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지구/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당해 비율은 각각 40~50% 정도로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도시'영역의 연구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가로/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축물과 가로에 대한 도시설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공간영역별 게재 논문수 변화

#### □ 학문적 영역

학문적 영역에 대한 분석은 한국도시설계논문 투고/

심사규정 중 학술연구논문의 구성(제4조)과 심사위원의 선정(제13조)의 심사분과(11개) 재분류를 통해 7개의 영역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계획 일반'과 '도시설계/조경설계', '도시개발/단지계획'의 3개 영역이 전체 346편 중 73.2%인 253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설계/조경설계' 영역이 28.9%로 지난 12년간 꾸준히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시계획 일반' 영역이 24.6%, '도시개발/단지계획' 영역이 19.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도시경관', '도시역사', '정책제도', '도시환경/생태' 등 다른 영역들은 10%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관계획'의 경우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책제도'와 '도시환경/생태'의 경우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의 양극화'와 '환경파괴', '구도심 쇠퇴' 등 그 동안의 개발논리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들이 겪고 있는 현대 도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요구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모색 등의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연구방법별 추세변화

##### □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분석은 '설문조사', '2차(집계)자료', '면접 및 사례조사', '설계 및 시뮬레이션'으로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면접 및 사례조사'가 전체 45.7%(158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통계 및 행정자료, 도면 등의 '2차(집계)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표 2> 공간적 영역별 비중 변화

(단위: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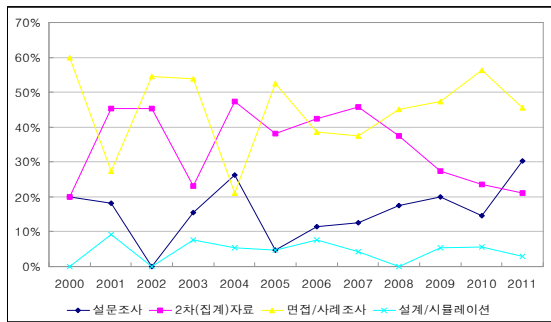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도시단위	3 (60.0)	5 (45.5)	4 (36.4)	5 (38.5)	8 (42.1)	8 (38.1)	12 (46.2)	12 (50.0)	14 (35.0)	25 (45.5)	24 (43.6)	24 (36.4)	144 (41.4)
지구/마을단위	2 (40.0)	5 (45.5)	5 (45.4)	5 (38.5)	9 (47.4)	10 (47.6)	13 (50.0)	11 (45.8)	20 (50.0)	27 (49.0)	27 (49.0)	29 (43.9)	163 (47.9)
가로/건축물 단위	0 (0.0)	1 (9.0)	2 (18.2)	3 (23.0)	2 (10.5)	3 (14.3)	1 (3.8)	1 (4.2)	6 (15.0)	3 (5.5)	4 (7.3)	13 (19.7)	39 (10.7)
합계	5 (100.0)	11 (100.0)	11 (100.0)	13 (100.0)	19 (100.0)	21 (100.0)	26 (100.0)	24 (100.0)	40 (100.0)	55 (100.0)	55 (100.0)	66 (100.0)	346 (100.0)

주: ( )는 당해 연도 비율을 의미



31.8%(110편), 설문지 및 면담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18.2%(63편),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컴퓨터 응용을 통한 연구가 4.3%(15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의 경우 2007년까지 한 해 2~3편 이었던 것이 2008년부터는 7~11편이 발표되는 등 절대 수에 있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당해에만 20편(30.3%)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2차(집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2008년부터 당해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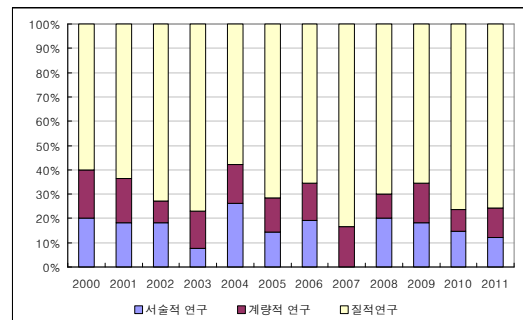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자료수집방법 변화

#### □ 연구접근방법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관점인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은 문헌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 법·제도적 접근을 포괄하는 '서술적 연구'와 통계적·수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계량적 연구', 그리고 사례분석이나 내용을 고찰 및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질적 연구'가 전체 논문의 71.4%(247편), '서술적 연구'가 15.3%(53편), 계량적 연구가 13.3%(46편)를 차지하고 있어 사례분석 등의 '질적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술적 연구'와 '계량적 연구'는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 '질적 연구'의 경우 당해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발표논문의 절대 수에 있어서는 2003년까지 10편 내외 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0편(75.8%)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도시설계 관련 연구가 학문적 이론과 통계적 계량논문 보다는 도시설계 사례분석과 내용 고찰을 통한 설계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연구접근방법의 변화

#### □ 계량적 분석방법

수치적 분석을 수행한 계량적 논문의 경우 어떠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연구접근방법에서 분류한 '계량적 연구' 뿐만 아니라 '서술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도 빈도분석 등 수치를 이용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접근방법 분류와 상관없이 계량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논문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크게 '단순기술통계 및 빈도분석'과 회귀모형 등의 '통계모형' 그리고 확률선택모형, 중력모형,

<표 3> 자료수집방법별 비중 변화

(단위: 편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설문조사	1 (20.0)	2 (18.2)	0 (0.0)	2 (15.4)	5 (26.3)	1 (4.7)	3 (11.5)	3 (12.5)	7 (17.5)	11 (20.0)	8 (14.5)	20 (30.3)	63 (18.2)
2차(집계)자료	1 (20.0)	5 (45.4)	5 (45.5)	3 (23.1)	9 (47.4)	8 (38.1)	11 (42.3)	11 (45.8)	15 (37.5)	15 (27.3)	13 (23.6)	14 (21.2)	110 (31.8)
면접/사례조사	3 (60.0)	3 (27.3)	6 (54.5)	7 (53.8)	4 (21.0)	11 (52.4)	10 (38.5)	9 (37.5)	18 (45.0)	26 (47.3)	31 (56.4)	30 (45.5)	158 (45.7)
설계/시뮬레이션	0 (0.0)	1 (9.1)	0 (0.0)	1 (7.7)	1 (5.3)	1 (4.8)	2 (7.7)	1 (4.2)	0 (0.0)	3 (5.4)	3 (5.5)	2 (3.0)	15 (4.3)
합 계	5 (100.0)	11 (100.0)	11 (100.0)	13 (100.0)	19 (100.0)	21 (100.0)	26 (100.0)	24 (100.0)	40 (100.0)	55 (100.0)	55 (100.0)	66 (100.0)	346 (100.0)

주: ( )는 당해 연도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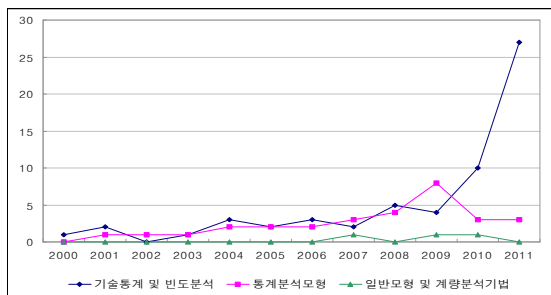




비용편익분석, 교통수요모형 등의 ‘일반모형 및 계량분석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346편의 논문 중 26.9%인 93편이 계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기술 통계 및 빈도분석’이 6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통계분석모형’이 32.7%, ‘일반 모형 및 계량분석모형’이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모형 및 계량분석모형’의 경우 2007년부터 한 해 1편 정도가 발표되었다. 반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과 ‘통계분석모형’을 이용한 논문은 그 절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수행한 논문이 당해 절대 수에 있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량적 분석을 통한 논문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연도별 계량적 분석방법 논문수

### 3) 연구자 특성 및 연구비지원

#### □ 연구자수 및 연구자 소속

도시설계분야 구성원의 확산과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수와 연구자의 소속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수의 경우 전체 346편의 논문에서 총 765명이 논문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논문당 평균 연구자수는 2000년 1.6명에서 2011년 2.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인 공동연구’가 전체 중 46.0%인 159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인 공동연구’가 36.7%(127편), 단독연구가 17.3%(60편) 순으로 나타났다. ‘2인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2007년부터 ‘3인 공동연구’의 당해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구자 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공동연구의 필요성 증가와 더불어 도시설계를 전공한 연구자와 대학원 전공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설계분야가 어느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소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논문 게재 당시 연구자의 소속을 기준으로 ‘전임강사 이상 교수’와 ‘연구기관’, ‘관련 기업체’, ‘대학(원)생 및 공무원’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자의 소속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단독연구와 공동연구 중 제1저자의 소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765명의 연구자 중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47.4%인 28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대학(원)생 및 공무원’이 33.6%(202명), ‘연구기관’ 9.0%(54명), ‘관련 기업체’ 5.3%(32명), ‘기타’ 4.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에 도시설계 관련 대학 교수 중심에서 2008년부터는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설계 전공자들이 본격적인 연구자로서 각종 연구기관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여 도시설계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련 기업체의 당해 비중이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설계 관련 공무원의 연구 활동 또한 미약한 상황이다.

전체 연구자 제1저자의 소속으로는 전체 연구자의 소속 변화와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 ‘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6년부터는 ‘대학(원)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임강사 이상 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1저자의 소속별 지역 분포

(단위: 명)

구 분	국내		국외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교수 (전임강사 이상)	91	23	1	115
연구기관	26	5	0	31
기업체	16	1	1	18
대학(원)생 및 공무원	76	29	2	107
기 타	4	5	0	9
합 계	209	58	4	271

제1저자의 지역적 분포 변화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76.4%인 214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이 22.2%인 62편, 그리고 국외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기타’가 1.4%인



4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체’에 소속된 제1저자의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특성과 장소성 등을 고려한 도시설계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의 도시설계 전문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연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연구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연구비의 지원여부를 살펴본 결과 순수학술활동 논문이 80.4%인 225편,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이 19.6%인 55편으로 연구비 지원 연구보다는 개인의 순수 학술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기관을 살펴보면 대학교가 61.8%인 34편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20.0%인 11편,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 등)가 3.6%인 2편, 외국대학 및 연구소 등의 기타가 14.6%인 8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급된 연구비로 수행된 논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창의적인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과 중앙정부의 연구지원이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설계 연구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결 론

도시설계는 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 도시설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우리나라 도시설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왔는지 그 걸어온 길과 발자취를 한번 돌아봄과 동시에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그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도시설계 대표 학술지라 할 수 있는 한국도시설계학회의 「도시설계」지에 게재된 논문 309편 전체를 대상으로 시계열적 차원의 변화와 내용을 살펴

보았다.

2000년대 말부터 도시설계분야의 연구자들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학회지가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한 해 평균 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이론 연구’ 보다는 ‘응용(설계)연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0년대 초기 이후에는 순수 이론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단위로는 ‘지구/마을단위’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문적 영역으로는 ‘도시설계/조경설계’와 ‘도시계획 일반’ 분야의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역사’분야에 대한 연구는 계속 감소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면접 및 사례조사’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례분석이나 내용을 고찰하는 ‘질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술적 연구’와 ‘계량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치적 분석을 수행한 계량적 논문의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사용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설계분야 구성원의 확산과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수와 연구자의 소속에 대한 변화로는 논문 한 편당 평균 연구자수가 2000년대 초기 1.6명에서 2000년대 말 2.4명으로 공동연구의 비중이 계속 높았으며, 이는 공동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도시설계를 전공한 연구자와 대학원 전공자 수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구자 소속으로는 2000년대 후반인 2008년부터는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 중반에 도시설계 전공 관련 학과수의 증가와 도시설계 전공자들이 연구기관에 본격적인 연구자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자신의 뒤를 살펴보는 궁극적 목적이 단지 뒤를 보기 위함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기 위함인 것처럼 지난날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설계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명실상부한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이승환(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사동(沙洞)

구한말 인천부 부내면 지역에 딸려 있는 작은 섬으로 모래섬이어서 사도(沙島)라 불렸다.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이 이 일대를 매립해 육지가 됐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이름을 바꿀 때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으로 빈정(濱町)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계속 사용되다가 1946년 사동이 됐다. 1977년에는 인근의 답동, 신생동과 합쳐져 행정동으로 신포동에 들어갔다.



오포도

### ▶ 오포도(五分島)

사도는 한동안 오포도라고도 불렸는데 이 섬에서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5푼짜리 위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신생동(新生洞)



동공원(東公園) 인천대신궁

<http://blog.naver.com/razzoqkr/20036880490>

구한말 인천부 부내면 지역으로 대부분 바다였다. 이 일대는 일본인들이 매립을 해서 새로 생긴 땅이다. 일본인들은 1912년 이곳에 궁정(宮町)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붙였으니 이는 이곳에 자신들의 신궁(神宮), 곧 신사(神社)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광복후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에서 신생동으로 고쳐 불렀다. 1977년 신생동은 다시 행정동으로 신포동에 편입됐다.

### ▶ 동공원(東公園)

1890년 일본은 지금의 인천여상 자리에 신궁을 세우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동공원이다.

## 답동(沓洞)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에 속해 있던 곳이다. 1903년 부내면이 생길 때 답동이 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본식으로 사정(寺町)이 된다. 그 후 1936년에는 옥정(旭町)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 다시 답동이 되었다. 1977년 행정동 신포동에 속하게 되었다.



1960년대 답동 로터리 시계탑, 건너편에 키네마극장

<http://blog.daum.net/alzade57/17944958>

### ▶ 논골

이 지역이 대부분 논이었기 때문에 논골로 불렸다고 한다. 논골은 한자로 답리(沓里)인데 탁계(濁溪)라고도 하였다. 탁계는 깨끗하지 못한 개울이라는 뜻으로 이곳 개울에는 물이 맑지 않았던 듯하다.





## 신 흥 동 (新興洞)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의 일부로 개항 초기 시의 외곽 지역이었다. 1903년 유곽이 있는 곳이라 하여 화개동(花開洞)이라 불렀다. 1912년 화개동의 일부와 주변의 신창동, 와정동(瓦鼎洞) 일부를 합쳐 일본식 이름으로 화정(花井)이라 했다. 광복 후 화정의 유곽이 폐쇄되고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뜻으로 신흥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당시 1가동, 2가동, 3가동이었던 곳은 신흥동이 되면서 역시 1가, 2가, 3가가 되었다.

### ▶ 화가동, 하가동

이곳 화개동을 와전된 발음으로 화카동, 혹은 하카동으로 불렀다. 화개동을 순 우리말로 꽃골말[花谷村], 꽃굴이라고도 불렀다.

### ▶ 모랫말

사동이나 신흥동이 생기기 전, 이 일대를 모랫말이라고 불렀다.

### ▶ 와정동

기와를 굽는 곳이 있다 하여 이렇게 불렀다.



『광여도(인천부)』의 신흥동(다소면) 일대

## 도 원 동 (桃源洞)



배다리에서 황골고개 가는 길  
<http://blog.naver.com/kkkk8155/140125747737>

구한말 다소면 장천리(長川里)와 독각리(獨脚里)의 일부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산정(桃山町)으로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개항 직후 일본인들이 이 산에 복숭아 과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광복 후 와식 동명 개정 때 도원동으로 개칭하였다.

### ▶ 황골고개

황골고개라고도 불렀다. 송의동에서 배다리로 넘어가는 도원동 고개 마루턱이 황골고개다. 황골은 황골의 발음이 바뀐 것으로 이것은 황골 곧 한골에서 온 것이다. 크다는 뜻의 순 우리말 한과 골짜기 또는 마을 등을 뜻하는 골이 합해진 말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황골고개는 큰 골짜기나 큰 골짜기 마을로 풀이된다.

## 울 목 동 (栗木洞)

울목동은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송림리 지역이었다. 제물포 지역에 부내면이 생기면서 이곳이 면소재지가 됐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울목리가 됐다. 한자의 뜻 그대로 울목동은 밤나무가 많은 조그만 언덕에 생긴 마을이어서 붙은 것이다. 1977년 유동과 울목동을 통합하였다.

### ▶ 새동네

울목동에 새로 생긴 마을로 신촌말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초까지 남았던 울목동 기와집 골목  
<http://blog.naver.com/kkkk8155/140188023945>

###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참고문헌 : 인천역사 6호 - 인천 지명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권,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 □ 법률 개정사항

### [2013-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발주와 관련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청이 심층평가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건설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배점 및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감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술기준과>

### [2013-4-8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진다]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9일부터 40일간(4.9~5.19)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 분과위원회(10~15인) 5개 이내 구성, ②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 3일 이내 하자 보수 또는 필요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 통보, ③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 규정, ④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 부담 : 권리행사 기간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의무 명시, ⑤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 상향 : 최소면적 기준 상향(12㎡→14㎡), 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개선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 ⑦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근거 마련 : 필요시 조기상환 가능토록 근거 마련.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 [2013-4-16 주택 착공시기원룸형 주택공급 '탄력적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20일간(4.17~5.7)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 사업성 악화 우려 및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착공 연장사유 추가,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 조례로 원룸형 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 지정,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 30㎡미만 세대당 0.5대, 30~50㎡이하 세대당 0.6대 설치 규정, ④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포함, 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허용. <주택건설공급과>

### [2013-4-19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20일간(4.22~5.13)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 적용대상 85㎡이하로 축소, 적용비율 40%로 완화, ②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 : 비율 조정 권한을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 ③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 : 다주택자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 부여, ④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 10%로 확대, 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폐지. <주택기금과>

### [2013-4-23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난개발 방지와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함. 개발부담금을 한 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고, 대상은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임. 개별입지사업에 의해 자연경관 훼손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개별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성실 납부자에 대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시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함.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토지정책과>

### [2013-4-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평가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소득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시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보상금 산정에 대한 예외 인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녹색건축과>

## [2013-4-30 내년부터 중간소음, 결로,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공급 ...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30)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 일정 두께와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시공 의무화, ②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신설 : 500세대 이상 주택의 창호, 벽체 접합부는 결로방지 성능 확보, 결로발생 취약부위는 결로방지 상세도 작성 의무화, ③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 확대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 개정안은 5월 초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택건설공급과>

### □ 새로운 정책

## [2013-4-1 도시공원, 도시 침수예방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을 확충하여 빗물 투수면적을 늘리고, 빗물유출 조절기능을 강화하는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4월부터 시행함. 도시공원이 부족한 인구밀집 침수지역에 저류형 도시공원(생태형·운동시설형·지하매설형·복합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 양재근린공원과 목포 이로공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함. 저류시설을 설치·확대하는 방안은 기존의 우수배수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강우를 저류시켜 효율적으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음. 이와 함께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도심내 상습침수지역을 조사하고 2014년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저류형 도시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임. <녹색도시과>

### ▪ 도시공원을 활용한 저류시설 유형



생태형



운동시설형



지하매설형



복합형

## [2013-4-1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관계부처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함. <대책 수립 배경>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함. <대책 주요내용> 수요억제-공급확대에서 탈피하여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조기회복을 도모함. 또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할 계획임. 1. 주택시장 정상화 ① 주택 공급물량 조절 :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 지원,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 촉진,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 조례·규칙 개정사항

### [2013-4-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근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 일정기간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구역지정 기준요건을 강화하여 전면철거 방식의 신규 정비사업 억제, ② 주민동의 기준 강화와 구체적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 ③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과 구역지정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미신청 구역은 시장직권 정비구역 해제 근거 마련, ④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저소득층 재정착을 위한 현황을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조사 반영, ⑤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완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 확대, ⑥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분양신청 전 제공하여 분양신청자가 사업참여 여부 판단, ⑦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을 신설하여 사업주체가 정관 작성시 반영,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가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정책관>

### [2013-4-2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자체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행정지원 협의회”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4월 22일부터 7일간 (4.22~4.29) 입법예고함.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 주요정책

### [2013-4-5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계획수립]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의 대비책은 예방이 최우선인 점을 감안

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관련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으로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마련해 각 공동주택에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계획함. 관련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사)인천아파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음.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단체 직무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각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실적, 분쟁해결사례를 관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에도 이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를 선정할 계획임. 또한, 시·군·구 환경정책과에서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를 설치·운영 추진해 상담은 물론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군·구 건축과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방안 마련함. <건축계획과>

### [2013-4-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생활밀착형 선도사업 확정]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대안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의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8개소(인현, 북성, 박문여고주변, 송의4·7, 주안북초교북측, 만부, 삼산2, 천마초교서측)를 확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사업으로 449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함. 인현구역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낡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노인계층이 모여 있는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골목길 정비, 공동작업장 설치 등 맞춤형 소규모 특화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북성구역은 비산단지 및 공장지대 밀집지역으로 골목길과 빈집을 정비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함. 박문여고주변구역 등은 주차장, 도로, 소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상임. 금번 추진되는 선도사업은 공공의 주도적 관리 하에 주민과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계획단계부터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또한, 선도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2단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제외된 사업과 추가 해제지역은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선도사업 예산과 병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기금을 적립하기로 함. 이와 함께 IFEZ 개발이익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지원하고 주민 친화적 인천형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원도심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만간 원도심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주거환경정책관>

### [2013-4-18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 임대 주택 확대 공급]

기존 전세임대사업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지자체가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임. 올해 전세임대주택 400호를 자체 공급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함.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호당 7천만원이 지원되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280억을 지원받아 추진 중임.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인 11만원 정도이고,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함.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접수하고,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됨. <건축계획과>

### [2013-4-24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3. 4. 24(수), 14:30 ~ 15:25
- 장 소 : 영상회의실
- 참 석 : 26명중 19명 참석
- 총 2 건 ( 원안 가결 2 )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최 결 과
1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 원안 가결
2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	• 원안 가결

<도시계획과>

### [2013-4-27 2013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개최]

건축의 학문적 연구 및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정책의 개선 및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건축분야 전문단체인 “대한건축학회”의 정기총회가 4월 27일 송도 포스코글로벌

별 R&D센터에서 개최됨. 정기총회는 서치호 학회장의 개회사,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학회발전 및 인천시 GCF 유치 및 시책 등을 홍보하는 축사가 있었음. 또한, 대한건축학회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국내 건축관련 교수 약 6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함. <건축계획과>



### [2013-4-30 주거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사)인천아파트연합회와 전국 최초로 '주거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찾아가는 아파트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과 인적·물적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사)인천아파트연합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기로 함. 또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함.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공동수행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5대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임. <건축계획과>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